

인간과 정부, 그리고 문명



김태영

교수 · 행정학



흔히 사회라고 축약된 인간 사회(human society)는 자연의 원리와는 달리 작동돼야 하며, 그 다음을 담보해 줄 수단이 바로 정부라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원시인의 손에 들린 손도끼와 같이 인류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은 도구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의 표현대로 “사유의 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유의 세계에 존재하는 최상급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를 통해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본질, 즉 정부가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를 활용하는 당사자의 인간화(humanitarian) 수준에 기인한다. 유용한 도구도 유인원의 손에 들리면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지만, 인간의 손에 들리면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지구의 승자가 된 인간은 유인원에 비해 협업 능력이 탁월하다. 인간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고민하고 협력하는 데 비해 유인원은 서로를 배제하고, 동물적 협력 수준에 머문다. 최근 듀크대학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2021)에서 “인간이 자기 가축화(self domestication) 과정을 통해 유인원 등 다른 동물보다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한다. 가축화는 곧 인간화를 의미한다. 야생에 남아 야생으로 살아가는 유인원의 손에 들린 도구는 남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간의 손에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누구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협업의 수단이다. 신이 인류에게 협력하는 재능을 주었다고 알려진 것처럼 인류는 협업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특이한 생명체다. 정부의 용도는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장치라는 데 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내의 약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외부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정부의 기본 책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 모두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

동체 내의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을 상존한다.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종의 커다란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장치다.

인류가 이처럼 큰 보험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저에는 정의감(dike)과 염치(aidos)라는 독특한 특성을 인간 내면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일종의 정의감과 염치가 부분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는 보고는 있다. 예컨대, 동료 까치가 매에게 공격당할 때 자리를 뜨지 않고 매를 공격하는 것을 일종의 정의감으로 인정하는 분들도 있다. 배가 고파도 새끼의 음식을 탐내지 않은 어미 개의 행동 역시 염치 있는 행위로 인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정의감과 염치에 기초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인간은 정의감과 염치에 기초해 행동을 보인 유일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정의감과 염치가 없는 인간은

나오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는 브라이언 헤어 교수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진화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인간 사회가 자연화(naturalization) 또는 야생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17~18세기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상태(nature state)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인류는 이미 자신들의 사회가 자연의 원리대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법칙에 말려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운영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흔히 사회라고 축약된 인간 사회(human society)는 자연의 원리와는 달리 작동돼야 하며, 그 다음을 담보해 줄 수단이 바로 정부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명저 *The Great Transformation*(1944)을 통해 “인간 사회가 자연(nature)과 시장(market)에 의해 침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인류는 놀랍

게도 자연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배움이 지나치다 못해, 인간 사회 작동의 원리마저 자연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것으로 짐작된다. 폴라니의 일침은 인류가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로 포장된 시장주의의 핵심은 인간 사회가 약육강식의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야생인의 욕망이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라는 해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심지어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다는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괴물 이론을 내놓기도 했다. 19세기 말 야경국가론이 전자이고, 20세기 중후반 등장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후자다. 21세기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매우 평화로운 시기, 별다른 논리 없이 사실상 정부 무용론을 강조한 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라는 도구가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유인원의 손에 들린 흉기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야생인의 소망일 것이다.

1년 전 사망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밝힌 인간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고도로 협력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배제보다는 포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지구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들이 정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수만 년 전 유인원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가축화되는 길을 택하며 야생성을 버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문명을 발전시켰다. 경쟁하던 다른 유인원들은 남을 철저히 배제하고, 복수하고, 응징하며 오로지 자신과 자기편만을 위한 야생성과 야만성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낙오하고 말았다. 정부라는 도구가 야만인에게 주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다. 히틀러에게 맡겨진 정부의 폭력성은 문명을 퇴보시켰다. 정부 자체보다는 정부를 운영하는 자가 어느 정도 가축화됐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인간화됐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류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